

초광역 정부 틀 갖추고 반도체 성장 기반 다졌다

전남광주 통합 100일 <상> 행정·산업 통합의 성과

광주 산업·연구개발과 전남 전력·용수·공동 경제권 추진
조례 정비·3개 청사 기능 재편·통합 행정조직 본격 가동
군공항 이전·산단·기반시설 확충·대규모 투자 실현 과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오는 8일 출범 100일을 맞는다. 40년 만에 다시 하나가 된 전남과 광주는 행정조직을 정비하고 반도체 산업을 함께 키울 기반을 마련했다. 하지만 청사 배치와 의대 선정 등을 둘러싼 지역 갈등은 여전하다. 사는 곳에 따라 다른 교통·의료·복지 제도를 조정하는 일도 남았다. 통합의 틀은 갖춰지고 있지만 시민이 생활에서 변화를 느끼기까지는 풀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본보는 통합 100일을 맞아 행정·산업 분야의 성과와 시민 생활에 남은 과제 등을 두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 100일 만에 초광역 지방정부의 운영 틀을 갖추고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공동 성장에 나서고 있다. 따로 운영하던 행정조직과 제도를 정비하고, 광주의 산업·연구개발 기반에 전남의 전력·용수를 연결하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두 지역이 각각 경쟁하던 투자 유치와 산업 육성도 하나의 경제권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체제로 바뀌고 있다.

지난 7월 1일 출범한 통합시는 오는 8월 100일을 맞는다. 1986년 분리 이후 40년 만에 다시 합쳐진 전남과 광주는 인구 320만명을 아우르는 지방정부로 재편됐다. 옛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각 맡았던 행정과 산업정책, 지역 현안도 통합사로 모였다.

출범 초기에는 두 지역의 행정체계를 하나로 묶는 작업에 집중했다. 서로 다른 조례와 규칙을 정비하고 부서별 업무를 조정하는 한편, 광주·무안·순천의 3개 청사 기능을 재편했다. 두 광역자치단체가 각각 운영하던 조직을 통합정부에 맞게 다시 짜는 과정이었다.

첫 조직개편안은 주요 부서 배치를 둘러싼 진통 끝에 시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7일부터 새 조직이 가동된다. 통합시 출범 이후 100일 가까이 이어진 조직정비를 거쳐 통합된 업무체계에 따라 주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3개 청사는 균형 운영 기조 아래 기능을 나눠 맡는다. 특정 청사에 모든 업무를 모으는 대신 기존 청사를 활용하면서 지역별 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방식이다. 다만 부서가 여러 청사에 나뉘면 업무 협의와 민원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하는 과제도 함께 안았다.

산업 분야에서는 광주와 전남의 서로 다른 강점을 연결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정부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반도체 클러스터다. 광주 군공항 일원을 중심으로 반도체 투자와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본격화하면서 두 지역의 산업 기반을 함께 활용하는 구상도 구체화했다.

광주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의 산업·연구개발 기반을, 전남은 대규모 생산시설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부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 통합시는 이를 연결해 연구개발부터 생산, 기반시설 공급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생산시설은 입지 확보만으로 가동할 수 없다.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 공급, 폐수 처리시설 등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 통합 이후에는 이들 시설을 옛 광주와 전남의 경계에 구애받지 않고 배치하고, 관련 사업을 하나의 지방정부가 조정할 수 있게 됐다.

과거 두 지역이 대형 국책사업과 기업 유치를 놓고 각각 대응했다면, 이제는 광주의 산업 수요와 전남의 자원 여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는 구조다. 투자 유치와 기반시설 확보를 연계하고 인접 시·군과 협의하는 범위도 넓어졌다. ▶2면으로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코스모스 꽃길 걸으며 맑고 화창한 날씨를 보인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 한국대나무박물관 인근 코스모스 경관 조성단지를 찾은 나들이객들이 활짝핀 코스모스 사이에서 사진 촬영을 하며 가을 정취를 느끼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호남에 부족했던 건 자원 아닌 산업 기반”

신정훈 “에너지·수자원 반도체와 연결해 제2 생산거점 육성”

국감 핫이슈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사천)은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반도체 생산축을 만드는 국가 산업 전략으로 규정하고 “지역의 에너지와 수자원을 산업과 일자리로 연결해 국가 대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면

신 의원은 각 권역별 공업용수 이용량을 제시하며 “호남에 물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동안 대규모 공업용수를 사용할 산업이 없었던 것”이라며, “이 격차는 산업화 과정에서 호남의 산업기반이 사실상 ‘가내수공업 수준’이라 할 만큼 빈약했는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3년 전체 공업용수 이용량 가운데 영산강권역은 1.7%에 불과한 반면 한강권역은 31.1%, 낙동강권역은 33.7%로 각각 18배, 20배 수준의 격차가 났다. 풍부한 에너지 여건도 제시했다. 지난



2024년 발전량과 전력판매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전남의 전력자립률은 213.4%에 달하며,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분석에서는 재생에너지 잉여율도 53.1%로 나타났다.

태양광 출력제한 일수도 2023년 2일에서 2024년 26일로 늘어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지역 산업에서 활용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신 의원은 “호남에 부족했던 것은 자원이 아니라 이를 산업과 일자리로 연결할 기반이었다”며 “풍부한 에너지와 수자원을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이 지역에서 직접 활용하도록 하고 더 많은 산업과 투자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진정한 균형발전”이라고 강조했다.

용수 역시 반도체 제2 생산거점 추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아니라 국가가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풀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235@gwangnam.co.kr

알림

2026 제15회 중소기업경영인대상

선진경영·고용창출 등 6개 부문…11월 13일(금) 마감

전남광주 경제특화 종합일자리 광남일보는 경영인들의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중소기업경영인대상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경영 기법과 차별화된 마인드로 한 해 동안 지역경제 발전을 주도해 온 기업과 경영인을 공모합니다.

공모부문은 △선진경영 △고용창출 △기술혁신 △조세성실납부 △친환경경영 △여성·청년CEO 등 모두 6개 부문입니다. 우수 중소기업과 경영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공모대상 : 중소기업경영인 누구나
- △공모기간 : 2026년 09월 16일(수) ~ 11월 13일(금)
- △심사발표 : 2026년 11월 24일(화) 광남일보 지면(예정)
- △접수방법 : 광남일보 홈페이지(www.gwangnam.co.kr)에서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이메일(gnilbo2@daum.net) 접수 (증명사진 1매, 활동사진 2매 이상 이미지 파일 따로 첨부)
- △심사내용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상 등
- △심사상식 : 2026년 12월 15일(화) 오후 2시 / 광남일보 아카데미홀
- △주최·주관 : 광남일보, 전라도나
- △후원 : 중소벤처기업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지방노동청, 전남광주지방중소벤처기업청
- △문의 : 광남일보 사업국 (062-370-7090)
- ※ 위 내용은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누리호 5호기 고흥서 오늘 발사 ▶관련기사 2면

함께 만드는 복지

www.bokjiro.go.kr

• 2027년 기준 중위소득 •

가장 어려운 국민의 삶에 와닿는 두터운 기초생활보장

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0% 인상

4인 가구

2027년 692만 9,885원

2026년 649만 4,738원

2025년 609만 7,773원

달라진 대한민국 현실에 맞게!

202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 지원을 더 든든하게!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1인 가구 87만 6천원 (5만 5천원 ▲) 4인 가구 221만 8천원 (13만 9천원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1인 가구 109만 4천원 (6만 9천원 ▲) 4인 가구 277만 2천원 (17만 4천원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1인 가구 131만 3천원 (8만 2천원 ▲) 4인 가구 332만 6천원 (20만 9천원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136만 8천원 (8만 6천원 ▲) 4인 가구 346만 5천원 (21만 8천원 ▲)
---	--	--	--

한 사람의 삶도 그늘에 남겨두지 않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이 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통해 실시되었습니다.